

기고

김홍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



위기극복의 자양분 '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의 공급과 운영에서 민간투자제도는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하고, 부족한 정부 재원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민자유치 정책에 힘입어 많은 인프라 시설이 성공리에 추진돼 2008년 전체 사회기반시설 투자액 중 민간투자의 비중은 27% 수준으로 확대됐다.

그런데 이러한 민간투자 사업이 금융경색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국내 금융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은행 및 제2금융권 등에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투자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민간의 자본으로 학교와 체육관 등을 건설하고 정부가 공사비와 운영비를 보전해주는 학교 임대형 방식(BTL) 사업의 경우 많은 곳에서 공사가 중단되거나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6일 비상경제대책회의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열어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민자 사업을 조기에 정상 추진하기 위한 대책으로 금융경색 완화, 규제 완화, 사업기간 단축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한다. 먼저, 자금 조달 어려움을 감안해 특별융자 1조원을 공급토록 할 계획이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도 추가 공급할 것이라고 한다.

또 급격한 금리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축소시키기 위해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금리변동 위험을 분담하는 방안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금리안정에 따라 재정 중립적으로 운영될 것이나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민자사업은 착공을 위한 준비에 30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이를 2분의 1 이내로 대폭 단축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침체기에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현금 보유량은 늘리고 투자 규모는 줄이려 하며, 금융권은 리스크가 큰 사업에 대해 투자를 기피하게 된다. 그렇지만 위기가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업들과 금융권도 미래에 대한 투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장기 투자에 대해서 단기투자와 시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함께 민간자본을 충분히 활용해야 할 때다. 이번에 마련될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통해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인 일자리를 만들고, 학교·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이 적기에 확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